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전망

대외 여건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등에도 불구하고 2%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 확대를 통해 6%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일본 대지진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2010. 10월,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계	4.2	4.5	4.6	4.6	4.6
- 선진국	2.2	2.6	2.6	2.5	2.4
- 개도국	6.4	6.5	6.6	6.6	6.7

대내 여건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소득과 고용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증가 예상
- 설비투자는 높은 가동률과 기업부문의 양호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경기부진, 관련기업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
- 상품수출은 신흥국의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위험요인 상존

-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부분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

《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IMF(2011.4월)	4.46	4.18	4.17	4.05	4.04
OECD(2011.5월)	4.6	4.5	-	-	-

2. 국가 재정정책 및 자원배분 방향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운용

- 재정준칙 법제화 등 보다 강력한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중기재정 건전화 계획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

* 재정준칙 : 재정수지(국가채무), 재정지출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해 설정한 재정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규칙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세원관리 강화, 국유재산 및 체납조세 관리 효율화 추진 등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 추진

- 비과세·감면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정책목적은 달성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
-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고액체납자 출국 규제 등 탈세행위 관리수단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출 효율화

- SOC 투자, 복지지출, R&D 및 교육의 미래투자간 자원배분을 점증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준치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시적인 지출 구조조정 강화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구분관리를 통한 선진국형 지출관리 도모
- * 의무지출 :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자원대책 마련 의무화 등 정부내 협의절차 강화
- * 재량지출 :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총량 규모 관리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경제분야 지출증가율은 낮추고 사회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창조적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주거·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탈수급 촉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

-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주도
- 국방투자를 효율화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과학 수사기반 확충, 여성·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등 지원 강화

3. 중기 세입 전망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지방세는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자동차세도 소폭 상승될 전망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에 따라 감소세 유지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11.7.6.)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추가징수 등 소폭 상승요인 존재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세수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을 받을 전망

지방교부세는 비과세·감면 요구 증대, 소득세·법인세율 2단계 인하 예정 등으로 국세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 및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 예상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보조금 증가 요인 병존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소폭 상승 등으로 도세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 전망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채무 건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

4. 중기 세출 전망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 부담 증가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 진전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출 증가 예상

일하는 복지 혹은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다문화 사회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복지인력 충원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연계 지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충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신규 지출소요 증가 예상

민간영역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확대 예상

수질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환경 관련 지출 증가,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